1. 메이지 유신

일본은 19세기 후반 개항기를 통해 서구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고 메이지 정부는 급속한 개혁 정책을 통해 근대적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했다.

1881년 메이지 정부는 국회 개설의 방침을 밝히고 입헌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토의 지휘아래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추밀원 심의를 거쳐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에 의해 공표되었다.

헌법의 제정에 따라 1890년 7월 첫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입헌자유당, 입헌 개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적인 민당이 승리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중의원 선거와 함께 귀족원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11월에 제국의회가 수립되어 입헌체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사쓰마, 조슈 출신으로 형성된 번벌 세력에 의해 권력이 좌우되었고 정당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였다.

러일전쟁 이후 다이쇼 시대가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전개되었고 조슈 번벌을 배경으로 가쓰라 내각이 성립된 것에 항의하는 1차 호헌운동이 시작되어 가쓰라 내각이 붕괴되었다. 이후 다시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출범하지만 1924년 호헌 3파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통 선거의 실시를 약속하면서 2차 호헌운동를 전개해 중의원 선거를 이기면서 정당내각이 성립되었다.

2. 파시즘의 대두

1930년대 만주사변의 발발은 일본 파시즘의 시작을 알렸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만주사변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반일 운동이 일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작용했다.

이에 군부는 대외 강령론의 기수로서 정치에 나서 육해군 청년 장교층을 중심으로 급진파 세력을 결성, 국가 개조 슬로건을 내걸고 파시즘화를 추진해갔다.

1931년 육군 청년 장교들이 조직한 국가 주의적 비밀 결사 사쿠라카이 등이 군사정권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발각되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32년에 국가주의자 이노우에 닛쇼가 조직한 우익 테러 결사 혈맹단이 전 대장대신 이노우에 준노스케와 미쓰이 재벌 이사장 단 다쿠마를 암살하고 해군 청년 장교들이 수상 관저를 습격해 이누카이 쓰요시 수상을 사살하는 등 자유주의 정당내각을 부정하는 테러를 감행했다. (5.15 사건) 이 사건으로 일본의 정당정치는 끝이 나고 사이토 마코토가 이끄는 거국 일치 내각이 등장, 국가주의 혁신 세력의 힘이 대폭 강화되었다.

1. 일본의 55년체제 형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은 패전하고 GHQ체제가 들어서며 정치권은 크게 일본 사회당, 일본 자유당, 일본 민주당으로 나뉘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치러진 1947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사회당은 143석을 획득해 제 1여당으로 부상하지만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았고 좌우파의 분열 시작되어 결국 1949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48석으로 격감해 제2야당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 우파 분열 직후 사회당 좌파 54석 사회당 우파 57석으로 무려 111석을 차지했다.

일본 사회당은 호헌, 혁신, 안보를 내세워 1955년 당대회에서 보수정권의 개헌 논의에 대항하기 위해 오랜 분열을 딛고 통일을 완수했으며 중의원 의석도 156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일본 민주당은 일본사회당의 좌우 재통일로 인한 좌익세력 확장에 대항해 제 2야당으로 전락한 보수세력인 일본 자유당과 합당을 결의하여 개헌, 보수, 안보 수호를 내건 여당인 자민당을 창단하게 되고 이로써 국회 의석의 2/3를 점하는 정권의 수립에 성공한 자민당과 개헌 발의를 저지할 수 있는 1/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회당을 중심으로 당이 대립하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체제를 55년 체제라 부르게 된다.

3. 일본의 우경화

일본의 보수체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속에서 기존의 이익정치의 구조를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 함을 깨닫게 된다.

이에 나카소네 수상은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자민당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정치개혁을 통해 헌법개정에 장애가 되는 급진적 좌익세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전쟁후의 패전의식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정치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민당 신보수주의자들은 헌법개정에 방해가 되는 보수본류 세력과 야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가 되는 조건으로 연립정권의 수립을 결정하게 되고 일본 사회당을 정권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정권을 잡게된 일본 사회당은 비자민 연립정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이념 및 정신을 존중하고 외교 및 방위 등 국가 기본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를 통해 자민당은 기존 사회당의 외교, 안보 정책을 현실화하여 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당은 무라야마 내각의 낮은 지지율과 더불어 당 내에서의 이념 변화를 반대하던 강경파들이 떨어져 나가 분열되었으며 일본 사회당의 정체성을 잃고 몰락하게 되었다.

이는 개헌세력의 승리를 의미했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더욱 강력한 정권의 필요성과 정당체계를 보수 양당제(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로 개편하기 위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선거 하에 실시된 1996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무려 239석을 얻고 제1 야당인 신진당도 당내 대립과 보수주의 정책에 의한 입지의 약화 속에 6개로 분열되어 자민당 일강 체제를 구축하는듯 보였으나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현재까지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4. 현대 일본의 개헌의지

아베총리는 정계입문 이후 지속해서 전후 패전의식에서의 탈피와 헌법 9조 개헌을 주장하며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나 분쟁지역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지했다.

2018년엔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중-참의원 2/3의 의석이 2017년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및 개헌추진 세력에 의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에서 논의된 4대 쟁점 사항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교육충실’, ‘합구해소’이다.

‘합구해소’ 관련 개정 사항은 현재 참의원 선거구에 존재하고 있는 두 현으로부터 1명의 지역구 의원 선출, 즉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합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 규정과 관련된 4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충실’의 경우, 국민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26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넓혀 유아기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환경 정비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개헌안이다.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평상시 국가 체제로서는 대처할 수 없기에 의원의 임기연장 외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 긴급권을 제시하고 내각의 판단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정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 개정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자위대’ 관련 부분은 전력불보유 규정이 담긴 9조의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 대신 필요한 자위의 조치로 표현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R5cGrSuSxM>